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및 보호 방안  
과제책임자 정연주 부연구위원

##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 초록

- ◆ 가정 내 구성원이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지원과 정보 연계 방안이 필요함.
-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외국 정책 사례 검토,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종사자 대상 초점면접을 통해 통합적 지원이나 정보 연계에서의 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일원화된 핫라인의 활용, 국가 위기가정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음.

###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이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으로 모두 다를 수 있음. 또한 한 명의 피해자는 다른 가정구성원에 대해서는 가해자일 가능성도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는 다양한 가·피해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원 연계만큼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체계간의 연계와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함.
-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개인의 지지기반이 되어야 하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은 피해자 모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아내폭력 피해자가 지원 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장애인·노인학대 피해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 회복의 도움을 받고 있어 동일한 가정폭력이어도 대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주체가 분절적으로 구분되고 있음.

<표 1>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구분	가정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의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피해 지원 대상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운영주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아동권리보장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는 피해자 중심의 재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함.

## 설문조사 분석결과

### 가정 내 폭력 인식

-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 중 12.3%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만을 가정폭력으로 인식함. 제시된 9개의 유형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11.5%,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을 제외한 ①부터 ⑦의 모든 유형이 폭력이라는 응답은 0.7%에 해당하여, 법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0.7%로 나타났다.

<표 2> ‘가정폭력’으로 연상되는 폭력 유형

- 문1. 귀하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유형의 폭력이 떠오르십니까?  
다음 중 떠오르는 폭력 유형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
  -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폭력
  - (미성년의)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하는 폭력
  - (성년의)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하는 폭력
  - 부모·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하는 폭력
  - (손)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하는 폭력
  - 직계존속이 아닌 친인척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
  -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 사이에서의 폭력
  - 동거 중인 애인 사이에서의 폭력w
  - 기타

### 가정폭력 지원 기관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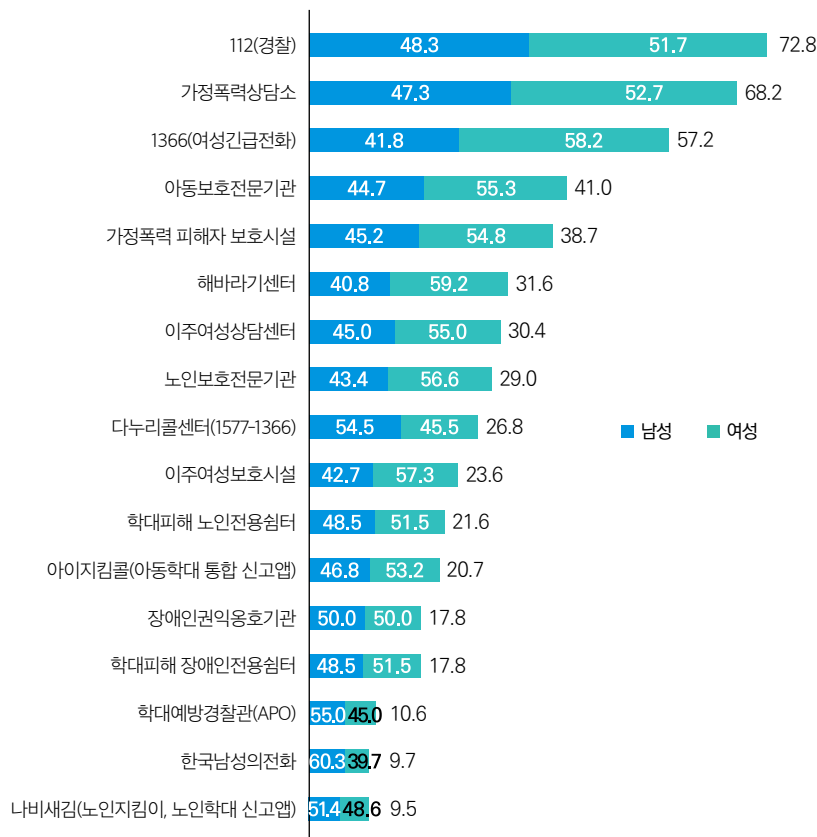
- ‘가정폭력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응답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응답자의 가정 내 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함. 피해 경험은 있고 가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인지율이 항목별로 가장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3> 가정 폭력 지원기관의 대상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성별		피해 경험 유무			
		남성	여성	직간접피해 경험 유, 가해 경험 무	직간접피해 경험 무, 가해 경험 유	직간접피해 및 가해 경험 유	직간접피해 및 가해 경험 모두 무
사례 수	754	376	378	214	41	284	215
남편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아내	87.9	83.8	92.1	88.8	90.2	87.0	87.9
부모·조부모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손)자녀	71.6	67.6	75.7	78.0	63.4	71.1	67.4
아내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남편	59.5	58.8	60.3	66.4	51.2	59.2	54.9
(손)자녀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조부모	56.2	51.3	61.1	59.3	56.1	58.8	49.8
형제자매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55.3	50.8	59.8	59.3	51.2	58.1	48.4
동거 중인 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45.4	41.5	49.2	46.3	46.3	43.7	46.5
직계존속이 아닌 친인척 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43.0	39.9	46.0	43.9	46.3	45.1	38.6
형제자매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성인	42.7	38.0	47.4	46.3	31.7	47.2	35.3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40.2	36.7	43.7	42.1	39.0	40.1	38.6

알고 있던 가정 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무엇인지를 복수응답으로 고르도록 한 결과, 112가 72.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가정폭력상담소가 68.7%, 1366이 57.2%임. 다른 시설의 경우 과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인지하고 있었던 가정폭력 지원기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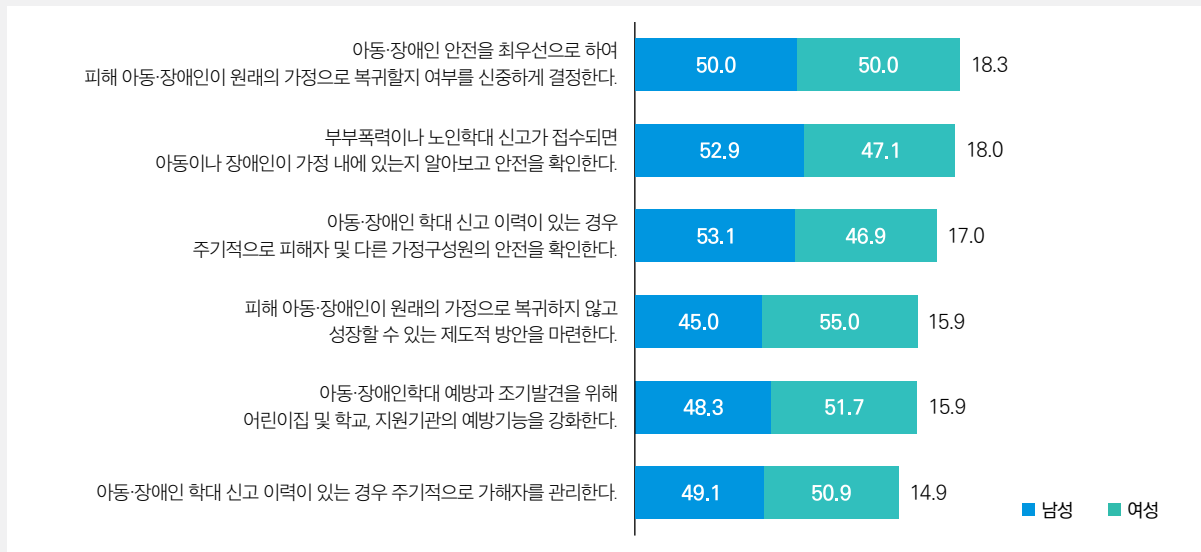


※ 항목 당 비율은 전체 754명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인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냄.

## ● 가정 내 폭력 예방 정책 우선순위

-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이나 원가정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원가정 보호’는 모든 폭력 유형에서 응답 빈도가 가장 낮아 5.6~8.2%의 빈도를 보임.
- 아동과 장애인학대의 재발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아동·장애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아동·장애인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로 전체의 18.3%가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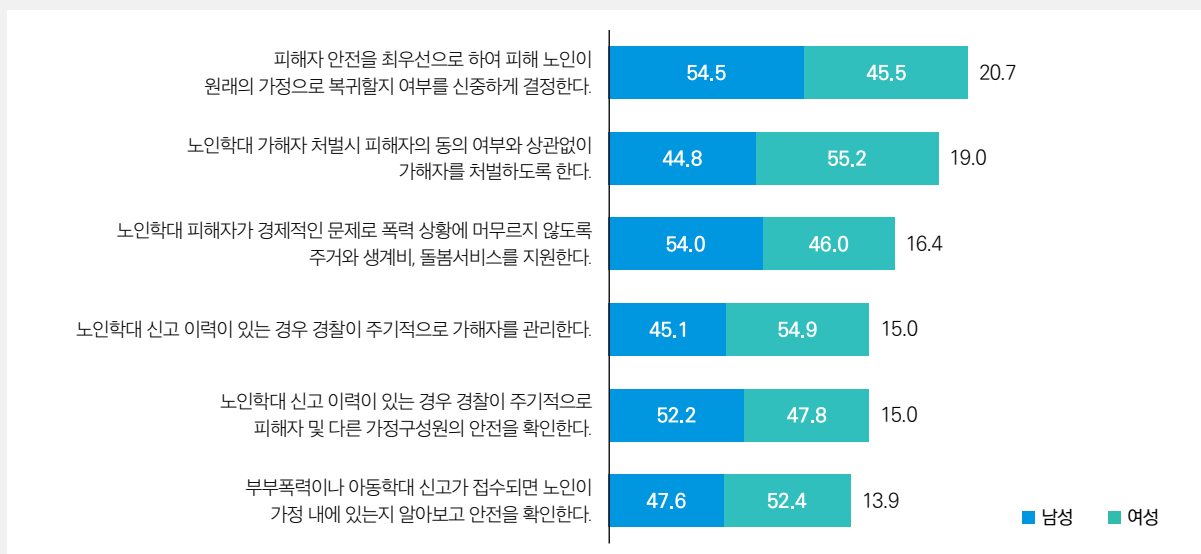
<그림 2> 아동과 장애인 가정 내 학대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항목 당 비율은 전체 754명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인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냄.

-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 수요를 살펴보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노인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가 20.7%로 가장 응답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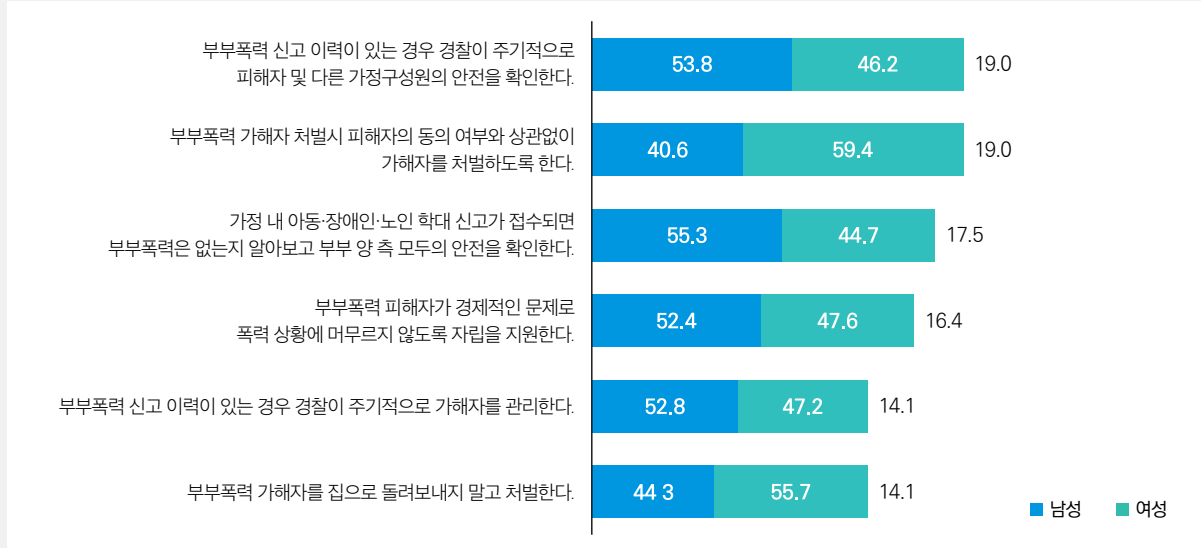
<그림 3> 노인 가정 내 학대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항목 당 비율은 전체 754명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인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냄.

- 가정 내 부부폭력의 재발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부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경찰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및 다른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확인한다’와 ‘부부폭력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처벌한다’가 각각 19.0%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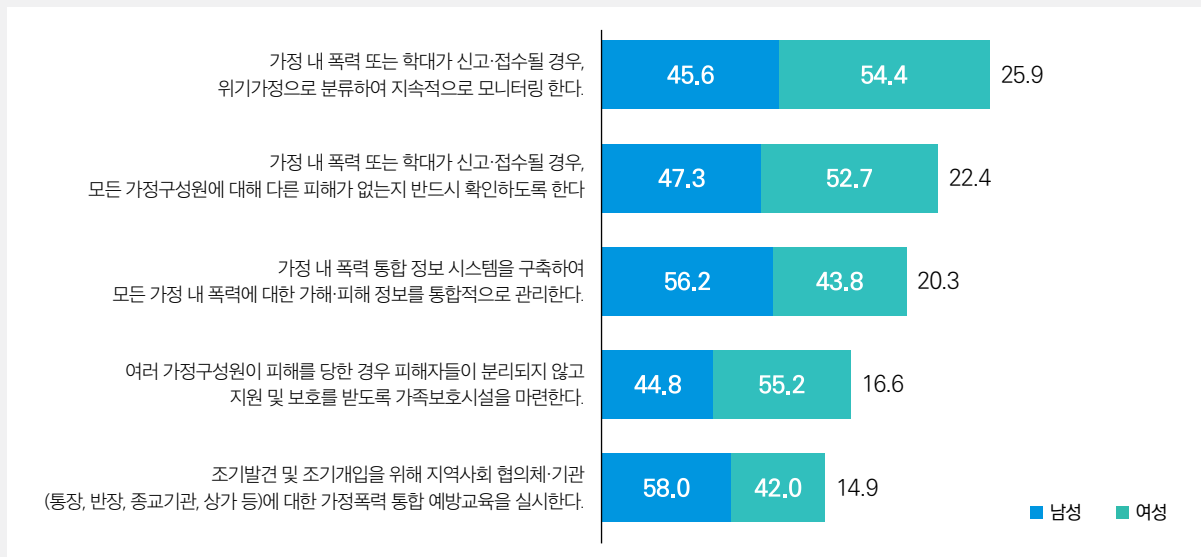
<그림 4> 부부폭력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항목 당 비율은 전체 754명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인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냄.

- 가정 내 폭력의 재발과 가정구성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통합지원 정책 수요를 확인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항목은 ‘가정 내 폭력 또는 학대가 신고·접수될 경우, 위기가정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로 25.9%가 선택함.

<그림 5> 가정 내 폭력 재발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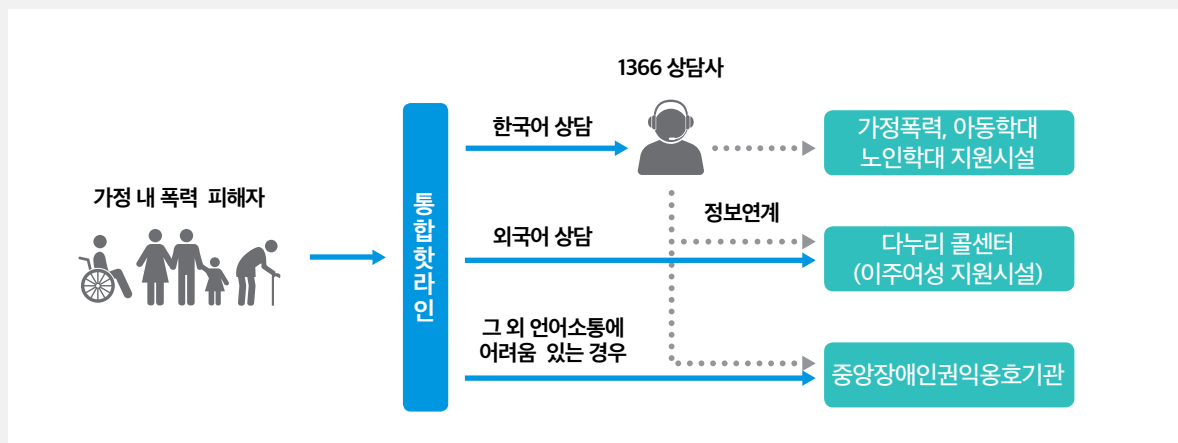


※ 항목 당 비율은 전체 754명 중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나타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 항목별 응답인원 중 성별 비율을 나타냄.

## 정책제언

- 사회 복지 분야에서 ‘통합’, ‘조정’, ‘연계’, ‘사례관리’, ‘협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 통합을 다루는데 이 또한 연계나 통합의 구체적 의미와 수단에 대한 논의는 희박한 실정임.
- 가정폭력 통합지원에서는 ‘통합지원’의 의미를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사례별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차원에서의 통합적 혹은 연계적 지원을 의미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서울시의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소나무센터)가 대표적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지원과 복지연계에 주목하는데, 위기가정을 ‘가정내 폭력 및 학대로 112신고된 가구’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주로 아내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아동학대 피해자지원체계 및 노인학대 피해자지원체계와는 분리되어 운영됨. 따라서, 기관 간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원 대상은 피해가구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 가정 내 폭력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먼저 일원화된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노인·여성·남성·장애인·아동 등 모든 사람이 가정 내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 상담이나 지원을 원할 경우 자신이 어떤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핫라인 번호를 통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기존의 지원시설이 가지고 있는 전화상담창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어디에서 지원이나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가정 내 폭력 상담전화번호를 마련하여 상담사가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시설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1> 가정 내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원화된 핫라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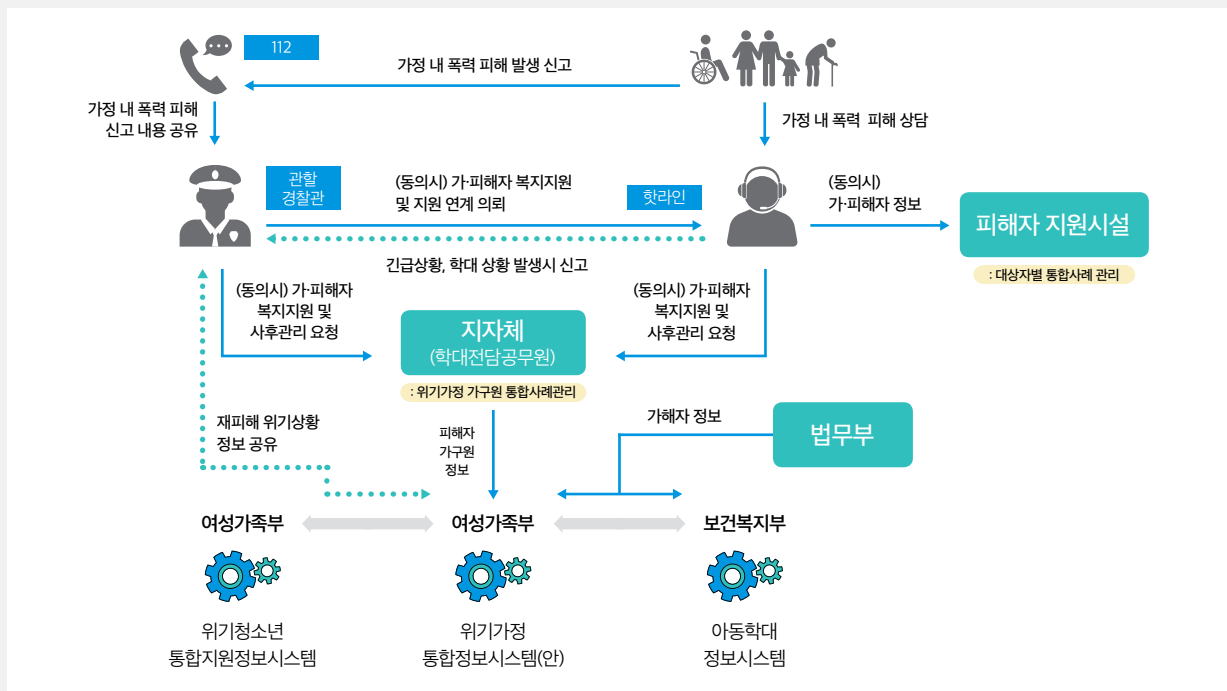
-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 뿐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 대해서도 지원기관의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1차적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밀접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 위기가정 관할 부서를 두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고, 중앙정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내의 지원기관 간의 자원 연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함.

### ● 국가 차원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정보연계와 통합적 지원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

- ▶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시스템은 법무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지자체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이것을 지원기관과 공유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이 있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임.
- ▶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속한 가정에 대한 이해 없이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됨.
- ▶ 아동학대관련정보시스템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위기가정의 맥락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학대피해 아동이 위기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일이 없도록 위기가정으로 분류하여 촘촘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가정정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국가 위기가정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법무부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